

정후식칼럼



논설실장·이사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지켜보며

키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면 지역 경쟁력이 높아지고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대구와 경북이 그 대열의 맨 앞에 있는데,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2022년까지 인구 510만 명의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문화 및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난 7월 세종시와의 통합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가 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인구 800만 명의 부산·울산·경남을 한데 묶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제2의 수도권으로 육성하자고 주장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광주·전남 역시 미래 경쟁력을 높이려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게 시도 통합 제안의 가장 큰 명분이다. 교통·관광·문화 등 각 분야에서 중복 투자나 과도한 경쟁을 피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게다가 인구 330만 명의 광역 경제권을 구성하면 지방교부세 등 정부 지원은 물론 지역 내 총생산(GRDP)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명분이야 나무랄 데 없지만

통합 제안의 폭발력은 컸다. 전남도는 '의견 수렴 선행'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즉각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도 통합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아마도 광주와 전남이 천년 이상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공동 운명체이자 한 뿌리라는 의식이 지역민 다수에게 내재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장의 제안은 이 같은 지역 공동체의 동질성을 자극함으로써 다중의 관심을 끌어들여오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는 명분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왜 지금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기류가 강하다. 해법을 논의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1년 가까이 회의 한 번 열지 못한 가운데, 광주 민간·군 공학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전남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시장의 제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주 지역 사회 내부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통합 상대방인 전남과 사전 교감은 물론 상호 신뢰도 쌓지 못한 채 '실의' 제안이나와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광주 시가 내부 현안인 자치구간 경계 조정도 수년째 풀지 못하고 있고, 확산하는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데 한몫한 듯하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평소 소신'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는다.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시작돼야 한다." 이 시장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서는 시기의 적절성과 미래 비전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형일자리 노사상생합의와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으로 경제·환경 분야의 전국적 이슈 선점을 꾀해 온 이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또 다른 '큰 그림' 아닌가 하는 의심의 시선도 있다. 김영록 전남 지사도 "통합에 앞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대 담론으로 이슈 경쟁에 나서서 모양새다.

문제는 당위성만 앞세우거나 '남들이 하니까' 하는 수준으로는 통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광주와 전남은 1986년 11월 광주시가 전남도에서 분리된 이후 두 차례나 통합을 시도했지만 총분한 의견 수렴 없이 하향식으로 추진되

는 바람에 끝내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 전례를 보거나 통합에 반대하는 시도민이 3분의 1 이상이라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선부론 통합 시도는 되려 또 다른 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수도 있다.

상생 노력과 공감 형성 먼저

통합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장점만 부각시켜서도 안 된다. 광역 행정 중심의 통합이 이뤄지면 기초 지자체의 자치권이 위협받고, 이들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특히 지역민들 사이에 하나라는 연대 의식이 없으면 작은 갈등이 분열로 비화하는 불씨가 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인구 등에서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됐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일부에선 '재분리'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경우 경기북부 분도(分道) 추진과 대도시들의 특례시 지정 등 독자 생존 움직임 등으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정적으로 광주·전남 통합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인 비전과 장단점 및 추진 전략을 먼저 제시하고 지역민의 공감을 얻어 내는 게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여기에 광주 공학 및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양 시도가 상생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끈끈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후 전개될 통합 논의의 과정은 광주·전남의 공생과 미래 세대가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비전을 철저히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다만 시도 모두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는 것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자칫하면 민심은 물론 지역의 미래까지 흐리는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펜칼럼



이병우  
우아포인트 대표

이젠 '춘철활인'이 필요한 시대

특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를 한 수레 가득 싣고 와서 이것저것 꺼내 써도 사람을 못 죽이는데 나는 단지 한 치 쇠조각만 있을 뿐이나 그것으로 당장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무리 정곡을 찌르는 것이라고 해도 '살인'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까요? 만약 요즘 시대에 이런 비유를 했다가는 언어 폭력으로 중벌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환자는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부를 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얼마 후 환자가 사망했다면 수술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춘철살인은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핵심을 찌르기에 몰입해서 사람은 어떻게 되든 고려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만약 부부나 친구 사이에서 춘철살인의 경우가 자주 오간다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춘철살인이 사랑의 언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무렵에 아침마다 받아보는 이

메일 레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레터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와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였습니다. 경영 이야기는 경영에 관련된 명언과 이를 해석하는 '춘철살인'의 코멘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레터를 아침마다 읽으면서 '춘철살인'이란 구절이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터 발행자인 조 대표에게 메일을 보낼까 했는데 마침 광주 경총 조찬 연수회에 강연을 온다고 해서 그때 말하기로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메일을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춘철살인'이라는 글귀를 볼 때마다 꺼림칙합니다. '살인'보다는 '활인'(活人)이 낫지 않을까요? 짧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뜻도 좋고..." 이런 제안에 조 대표도 흔쾌히 좋은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춘철살인' 대신 '춘철활인'이란 어구가 들어간 레터를 받아볼 수 있었

습니다. 작은 제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반영한 것에 대해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춘철활인'이 이곳저곳에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으로도 사용되고 강연이나 칼럼 제목으로 자주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춘철활인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소개한 칼럼도 있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일이 떠올라 최근에 조 대표에게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간의 곡절이 있었지만 '춘철활인' 제안을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는 답글을 받기도 했습니다.

'춘철활인'과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고 회자되는 것은 '행복한 경영 이야기'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자로서도 즐거운 일입니다. 춘철활인은 명석함보다 지혜로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관용과 포용이 필요한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도처에서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社說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추가 좋은 기회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에 '지역균형 뉴딜'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란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이며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한데 정부가 여기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약 75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사들의 갖가지 건의가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이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지역균형 뉴딜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지역사업 프로젝트에는 75조3000억 원(47%)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뉴딜 공모사업은 각 지자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지역 발전도에 따

라 차등된 가점을 부여하고 분야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기업들을 지원 하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사·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 시행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우리 광주·전남 지역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지표나 낙후지수 그리고 소멸위기에 지역 등에 근거해 공모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인구·경제성·접근성 등만을 고려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고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

이다.

'광란의 질주' 과속운전 처벌 수위 더 높여야

광주·전남 지역에서 시속 150km 이상으로 도로를 질주하다가 적발된 건수만 지난 5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시속 200km가 넘는 '광란의 질주'를 한 차량도 13대나 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광주·전남 지역 도로에서 시속 150km 이상 달리다 적발된 '초과속' 차량은 모두 115대였다. 이들 차량들의 속도는 시속 180km를 초과한 차량이 60대로 무려 52%에 달했고, 150-179km가 55대였다.

적발 구간은 영암-순천 간 고속도로로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부근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터널 앞과 진월IC 부근에서 각각 8대가 적발됐다. 고속·순환 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는 광주시 광산구 SK텔레콤 앞

에서 7대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들 운전자들에게는 고작 10만 원-13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졌다.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 13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제한 속도를 80km 넘겨 운전하면 초과 속도와 횡수에 따라 30만 원-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교통 전문가들은 초과속 운전에만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로 위의 흉기'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초과속 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 교통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위반 속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과거 농경사회에서 농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했다. 빗물에 의지해 경작하는 천수답(天水畓)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 농사를 망치는 일이 허다했다. 이 때문에 남의 눈물을 몰래 빼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여기에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아전인수'(我田汚水)다.

자기 눈에 물을 댄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데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갑

다는 단어가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다. 한 방송

사의 언택트 공연 '2020 대한민국 어게인 나혼아'에서 가수 '나혼아'의 소신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제각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이들 나혼아는 공연 도중 "이 나라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켰다"면서 '의사분, 또 간호사 여러분이 우리의 영웅'이라고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은 "속 시원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라고 해석했고, 여권에서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맞섰다.

나혼아의 언택트 공연은 코로나 사태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특히 노 개런티로 공연에 나선 나혼아에 국민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고, 오랜만에 무대로 돌아온 가황(歌皇)의 공연에 환호했다. 그리고 '나혼아 신드롬'으로까지 이어졌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역ભ리고 지친 국민들에게 나혼아 공연은 가뭇의 단비와도 같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마사의 언택트 공연 "2020 대한민국 어게인 나혼아"에서 가수 '나혼아'의 소신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제각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이들 나혼아는 공연 도중 "이 나라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켰다"면서 '의사분, 또 간호사 여러분이 우리의 영웅'이라고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야당

아전인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유현재  
농협중앙회 환경농업교육원 교수

'김장철 배추대란' 걱정할 필요 없다

인 농산물의 가격 상승을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며 김장철 배추 수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안타깝다.

올해 작황 부진으로 최근 배춧값이 급등한 것은 분명 사실이고, 팩트다. 하지만 이런 현상 때문에 김장철 배추대란을 걱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배추는 주로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고행지 배추로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7% 감소했다. 더불어 지루한 장마로 생산량이 급감해 9월 말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1만 1883원이었다.

하지만 김장철 배추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고행지 배추가 아니라 주로 해남에서 재배하는 가을 배추이다. 가을 배추의 경우 올해 재배 면적이 1만 2783ha로 지난해보다 16% 늘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긴 장마로 인한

고추, 마늘 같은 양념 채소 가격을 우려한다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 김장철 배추대란이 예상된다. 기사는 도대체 어떤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궁금하다.

배추와 양념 채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자신이 포장 김치를 많이 찾고 있다. 이에 포장 김치 생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남은 것이 없다며 수익률 하락에 울상을 짓고 있다. 포장 김치 생산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물론 김치의 가격이 올라 포장 김치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이리가 있다. 그럼 가을 배추가 나와 가격이 안정되면 다시 가격을 인하할 것인가?

농산물 수급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의 균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급이 어려울 땐 정부의 비축 물량을 풀어 국내에 서 대안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입을 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무턱대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켜 소비자에게 긍정적일 수 있으나 국내 농업 구조의 붕괴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안겨 준다.

우리나라는 중국, 멕시코, 이집트, 일본과 함께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다.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정확하지 않은 단편적 사실만으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특히 김장철 배추가격은 온 국민의 관심거리이다. 지금과 같이 작황이 좋지 않아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땐 생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 힘들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약용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가 없도록 정부와 농업 관련 기관에서는 관리 감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